

민주주의를 위한 경제제재의 역설: 아시아·태평양 권위주의 국가에서의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와 정치적·시민적 자유

심예나*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연구설계 |
| II.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와
정치적·시민적 자유 | IV. 분석결과 |
| | V. 결론 |

| 논문요약 |

본 연구는 민주주의 촉진을 목적으로 한 경제제재가 아시아·태평양 권위주의 국가의 정치적·시민적 자유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1990~2010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28개 권위주의 국가의 국가-연도 패널자료를 구성하고, 정치적·시민적 자유를 종속변수로 하여 국가 및 연도 고정효과를 포함한 이원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가 시행되는 시기에는 정치적·시민적 자유 수준이 낮게 나타났으며, 민주주의 촉진 목적을 가지지 않은 기타 경제제재를 함께 고려한 이후에도 이러한 음(-)의 관계는 유지되었다. 이러한 관계는 국내 무력충돌 요인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다른 민주주의 지표를 사용하거나 특정 제재국을 제외한 경우에도 대체로 유지되었다. 이는 민주주의를 촉진하기 위한 경제제재가 시행되는 시기에 역설적으로 낮은 정치적·시민적 자유가 함께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경제제재의 목적과 경제제재 시행기에 나타나는 대상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원

▪ 주제어: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 민주주의, 정치적·시민적 자유, 권위주의, 아시아-태평양

I. 서론

경제제재는 군사력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대상국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표적인 강압수단이다(Morgan et al. 2014). 특히 냉전 종식 이후 경제제재는 군사 및 안보상의 목적뿐만 아니라 인권 개선, 선거의 실시, 권위주의 통치의 완화와 같은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 가운데 민주주의와 인권의 증진을 명시적인 목표로 하는 제재는 탈냉전기 권위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주요 제재 유형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von Soest & Wahman 2015).

본 연구에서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democracy-promoting economic sanctions)는 대상국의 민주주의 및 인권 개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실시, 권위주의적 통치의 완화와 같은 민주적 변화를 명시적인 정책목표로 부과하는 경제제재를 의미한다.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는 권위주의 정부에 경제적인 비용을 부과하고 기존 정권의 정치적 기반을 약화시킴으로써 정치적 개방이나 정권교체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국내의 반정부 세력이나 시민사회가 활동할 수 있는 정치적인 기회를 확대하는 외부 압력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 von Soest & Wahman(2015)은 민주주의 촉진 목적의 제재가 권위주의 국가의 정권 및 지도부 교체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민주주의 수준의 증가와도 양(+)의 관계를 가진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경제제재가 오히려 권위주의 정부의 정치적 억압을 강화할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도 존재한다(Wood 2008; Peksen & Drury 2009; Escribà-Folch 2012). 경제제재로 정부의 자원이 감소하고 국내의 불만이 증가하는 경우 야당이나 시민사회의 반정부 동원이 증가할 수 있다. 권위주의 정부가 이러한 움직임을 정권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한다면, 정치적 반대와 사회적 동원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Peksen & Drury(2009, 2010)는 경제제재가 대상국 정부의 정치적 억압을 강화하고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 수준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시민적 자유를 중심으로 한 후속 연구에서도 경제제재와 시민적 자유 사이의 부정적인 관계가 제시된 바 있다(Adam & Tsarsitalidou 2019). 한편 제재의 목적을 민주주의로 한정된 일부 최근 연구에서도 제재의 부정적인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Peez(2025)는 민주주의 개선 및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행해진 서구의 경제제재를 1990년부터 2021년까지 분석하고, 제재가 시행된 이후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의 효과를 판별하는 시점은 연구 설정에 있어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동일한 제재 에피소드라도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가 장기적으로 권위주의 정권교체나 민주화를 가져오는지, 아니면 제재가 시행되는 단기적인 순간을 스냅샷으로 설정해 해당 기간 동안 시민과 정치 세력이 자유를 누리는지에 대해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장기적으로는 권위주의 정부의 정치적 기반이 약화되면서 장기적으로 정치적 개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외부 압력에 직면한 기존 정부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당장의 정치적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더욱이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경우,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기에 민주주의 촉진 제재의 효과를 판별함에 있어, 평가시기를 설정하는 기준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체제변화뿐만 아니라 제재가 실제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정치적·시민적 자유가 어떠한 상태에 놓이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아시아·태평양 권위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탈냉전 이후 민주화가 진행되는 동시에 권위주의 체제가 지속되거나 다시 등장하는 모습도 함께 나타났다. 또한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의 경험에서도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중국, 북한, 미얀마와 같이 장기간 제재가 지속된 국가가 있는 반면 피지, 파키스탄, 태국, 러시아, 튀르키예 등 특정 시기에 제재가 시행된 국가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지역적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제재 경험을 가진 권위주의 국가를 비교함으로써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와 대상

국의 정치적 자유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질문을 제기한다.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가 시행되는 시기에 아시아·태평양 권위주의 대상국의 정치적·시민적 자유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본 연구에서 정치적·시민적 자유는 시민과 정치세력이 정부의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거나,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등을 구성하여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특히 민주주의 촉진이라는 제재의 명시적인 목적에도 불구하고, 외부 압력에 직면한 권위주의 정부가 정치적 반대와 시민사회의 활동을 제한하면서 정치적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즉 민주주의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경제제재와 제재가 실제로 시행되는 시기의 정치적·시민적 자유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역설’ 역시 제재가 정치적·시민적 자유의 악화를 직접적으로 가져온다는 의미보다는, 민주주의 촉진이라는 제재의 명시적인 목적과 실제 제재 시행기에 나타나는 정치적 상황 사이의 괴리에 주목하는 개념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 28개 권위주의 국가로 구성된 국가-연도 패널자료를 사용한다. 1990년 이후는 냉전 종식과 함께 민주주의와 인권의 증진이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경제제재의 주요 정책목표로 등장한 시기이다. 또한 2010년은 본 연구가 제재 사건을 식별하기 위한 주요 자료로 사용하는 GIGA Sanctions Dataset의 체계적인 수록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전체 분석기간에 동일한 자료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1990년부터 2010년까지로 분석기간을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는 특정 국가-연도에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가 실제로 시행되고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이항변수이다. 핵심 종속변수는 대상국의 정치적·시민적 자유 수준을 나타내는 연속형 지수이다. 국가별로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특성과 특정 연도에 분석대상 국가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국가 및 연도 고정효과를 포함한 이원고정효과(Two-Way Fixed Effects) 모형을 사용한다. 또한 민주주의 촉진 목적을 가지지 않은 기타 경제제재와 국내 무력충돌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다른 민주주의 지표를 사용하거나 특정 제재국을 제외하는 분석을 진행한다. 추가적으로 전년도 1인당 GDP 성장률과 ODA를 포함한 분석 및 제한된 군집

수를 고려한 추론을 통해 기본결과가 유지되는지도 확인한다.

분석결과,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가 시행되는 시기는 정치적·시민적 자유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 국가 및 연도 고정효과를 포함한 기본모형에서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 시행 여부의 계수는 -0.148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기타 목적의 경제제재를 함께 고려한 경우에도 계수는 -0.148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성이 유지되었다. 선거민주주의지수와 자유민주주의지수를 사용한 경우에도 각각 -0.166과 -0.074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분석기간 전체에 걸쳐 제재 상태가 유지된 국가들을 제외하거나, GDP 성장률과 ODA 등 추가적인 요인을 고려한 경우에도 기본적인 결과의 방향은 유지되었다. 다만 제한된 군집과 유효변동을 고려한 추가적인 추론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약화되어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주의 촉진이라는 명시적인 목적에도 불구하고, 경제제재가 실제로 시행되는 시기가 낮은 정치적·시민적 자유와 함께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다음의 차이를 가진다. 첫째, 경제제재 일반이 아니라 제재의 목적을 구분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의 개선 및 민주적 변화를 명시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경제제재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경제제재 일반의 정치적 결과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경제제재가 대상국의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제시되어 왔다(Peksen & Drury 2009, 2010).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민주주의 촉진이라는 목적을 가진 경제제재로 범위를 좁혀 검토한다. 특히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와 기타 목적의 경제제재를 구분하여, 기타 경제제재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를 함께 고려한다.

둘째, 본 연구는 민주주의 촉진 제재의 최종적인 성공이나 제재 부과 이후의 민주주의 변화보다, 제재가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기간의 정치적·시민적 자유에 주목한다. 최근 Peez(2025)는 민주주의 및 인권 관련 제재의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제재 이후의 민주주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제재 부과 이후의 인과적인 효과를 추정하는 것보다, 국가 및 연도 고정효과를 고려한 이후에도 제재가 시행되는 국가-연도와 정치적·시민적 자유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두 연구는 유사한 문제의식을 가지면서도 분석하고자 하는 정치적 시점과 연구질문

에서 차이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아시아·태평양 권위주의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의 효과를 분석해 왔다. 본 연구는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지역적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제재 경험을 가진 권위주의 국가를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민주주의 촉진 제재에 관한 논의를 지역적 차원에서 다시 검토하고자 한다.

II.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와 정치적·시민적 자유

1.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의 개념과 기존 논의

경제제재는 일반적으로 대상국의 정책이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경제적인 관계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것을 위협하는 외교정책 수단이다(Morgan et al. 2014). 특히 냉전 종식 이후에는 핵폐기와 같은 군사 및 안보상의 목적뿐 아니라 인권의 개선, 선거의 실시, 권위주의 통치의 완화와 같이 민주주의와 관련된 목적을 가진 경제제재도 활발하게 시행되어 왔다(von Soest & Wahman 2015).

본 연구에서는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democracy-promoting economic sanctions)를 분석하고자 한다.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란 권위주의 대상국의 민주주의 및 인권을 개선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실시나 권위주의 통치의 완화와 같은 민주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제제재를 의미한다. 즉 제재를 시행하는 주체가 민주주의의 촉진을 행정명령, 결의문 등에서 명시적인 목적으로 설정했는지를 기준으로 제재의 명시적인 목적을 구분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도 제재가 시행되었는지 여부뿐 아니라 해당 제재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였는지를 구분하여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를 분석해 왔다(von Soest & Wahman 2015).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가 대상국의 민주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von Soest & Wahman(2015)

은 민주주의 촉진 목적을 가진 경제제재를 별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민주주의 촉진 제재는 권위주의 국가의 정권 및 지도부 교체와 관련되어 있으며, 민주주의 수준의 증가와도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주의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외부의 경제적인 압력이 권위주의 정권을 약화시키고 민주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경제제재가 오히려 대상국의 정치적 자유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Peksen & Drury(2009, 2010)는 민주주의 촉진이라는 목적에 한정하지 않고 경제제재 전반을 분석한 결과, 경제제재가 대상국 정부의 정치적 억압을 강화하고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경제제재로 인해 경제적인 불만과 정치적 반대가 증가하는 경우, 권위주의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정권을 유지하는 데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부는 정치적인 양보를 하기보다 반정부 세력과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최근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목적으로 시행된 경제제재만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부정적인 결과가 제시되었다(Peez 2025). 해당 연구는 민주주의 및 인권 목적의 제재가 부과된 시점을 중심으로 제재 이후의 민주주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민주주의를 목적으로 한 제재에서도 이후 민주주의 수준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촉진한다는 제재의 목적이 반드시 대상국의 민주주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의 효과에 대해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연구들은 제재가 궁극적으로 민주화를 가져오는가 또는 제재 부과 이후 민주주의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주로 관심을 두어 왔다. 그러나 제재가 최종적으로 민주화를 가져오는가와 제재가 실제로 시행되는 동안 대상국의 정치적·시민적 자유가 어떠한 상태에 놓이는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가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시기에 주목하고자 한다. 제재가 시행되는 국가-연도와 그렇지 않은 국가-연도에서 정치적·시민적 자유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민주주의 촉진이라는 제재의 목적과 제재 시행기에 나타나는 정치적인 상황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민주주의 촉진과 권위주의 강화의 경쟁적 메커니즘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가 대상국의 정치적·시민적 자유와 연결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경제제재가 권위주의 정부를 약화시키고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경우이다. 둘째, 경제제재라는 외부의 압력에 직면한 기존 정부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권위주의적 통제를 강화하는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를 민주주의 촉진, 후자를 권위주의 강화의 메커니즘으로 구분하고,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가 시행되는 시기 동안에 제재 대상국이 민주주의 촉진 메커니즘으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권위주의 통제 강화 메커니즘으로 나아가는지 그 경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민주주의 촉진 메커니즘이다. 경제제재는 무역, 금융 등의 영역에서 국제적 거래를 차단하여 대상국가를 국제경제 시스템에서 고립시키는 현상을 보인다. 그 결과 권위주의 정부의 경제적·정치적 자원이 감소하여, 정권 유지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권위주의 정권의 지지 세력의 힘이 약해지고, 반대로 야당이나 반정부 세력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가 정치적 협상이나 또는 지배세력의 교체로 연결되는 경우 경제제재는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외부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주의 촉진 제재가 권위주의 정권의 교체와 민주주의 수준의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연구는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준다(von Soest & Wahman 2015; Marinov & Nili 2015). 또한 경제제재와 함께 대상국의 시민 사회를 지원하는 경우 민주주의 촉진의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도 존재한다(Pospieszna & Weber 2020).

두 번째는 기존 권위주의 정부가 강압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메커니즘이다. 경제제재로 정부의 경제적인 자원이 감소하는 동시에 국내에서 경제적인 불만과 정치적 반대가 증가할 경우, 기존 정부는 이를 정권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정치적인 양보를 선택하기보다 반정부 세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정권의 불안정을 막으려고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Wood 2008). 특히 외부의 압력과 국내 반정부 세력의 움직임이 동시에 증가할 경우, 표현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정치적인 반대세력의 활동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Peksen & Drury(2009)는 경제제재가 대상국의 개혁을 가져오

기보다 정부의 정치적인 억압을 강화하여 정치적 자유를 악화시킬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Escribà-Folch(2012) 역시 외부의 압력을 받는 권위주의 정권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적인 자원과 억압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3. 아시아·태평양 권위주의 국가에서의 민주주의 촉진 제재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의 경우, 제재의 시행 주체를 미국, 유럽연합, 국제연합 등으로 구분하거나 혹은 포괄하여 진행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제재의 대상국을 지역 단위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다음의 측면에서 아시아·태평양 권위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지역 범위 연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냉전 종식 이후 민주화가 진행된 국가가 존재하는 한편, 권위주의 체제가 장기간 유지되거나 민주화 이후 다시 권위주의적인 통치가 강화되는 국가도 존재하였다. 하나의 지역 안에서도 정치체제와 민주화의 과정이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의 경험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존재한다. 중국, 북한, 미얀마와 같이 분석기간 동안 장기간 제재가 지속된 국가가 있는 반면, 피지, 파키스탄, 태국, 러시아, 튀르키예와 같이 특정한 시기에 제재가 시행된 국가도 존재한다. 따라서 동일한 지역 안에서도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가 시행된 시기와 지속기간에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는 아시아·태평양 권위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촉진이라는 외부의 압력과 대상국의 정치적·시민적 자유 사이의 관계를 비교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제재 시행기에 나타나는 정치적·시민적 자유에 주목한다. 민주주의를 촉진한다는 목적을 가진 경제제재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 정부가 외부의 압력에 대응하여 정치적인 통제를 강화한다면 제재가 시행되는 시기의 정치적·시민적 자유는 오히려 낮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의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H).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가 시행되는 시기에 아시아·태평양 권위주의 대상국의 정치적·시민적 자유 수준은 낮게 나타날 것이다.

Ⅲ. 연구설계

1. 분석대상과 범위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국가-연도(country-year)이다. 분석대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권위주의 국가이며,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와 정치적·시민적 자유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범위는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 ESCAP)의 지역분류를 적용하였다. 그 가운데 Hadenius, Teorell, Wahman의 권위주의 체제 분류(Wahman et al. 2013)를 참고하여 권위주의 국가를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 분석대상은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중국, 피지, 조지아, 인도네시아, 이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몰디브, 미얀마, 네팔, 북한, 파키스탄, 러시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태국, 튀르키예,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의 28개국이다. 아시아·태평양의 범위를 연구자가 임의적으로 정하기보다 공식적인 지역분류에 따라 분석대상을 설정하기 위해 ESCAP의 기준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이다. 1990년을 시작시점으로 설정한 이유는 냉전 종식 이후 민주주의와 인권의 증진이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경제제재의 주요 목적 중 하나로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기존의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 연구에서도 이러한 탈냉전기적 특징에 주목하여 1990년 이후의 제재를 분석해 왔다.

한편 분석 종료시점은 본 연구에서 제재 사건을 식별하기 위한 주요 자료로 사용하는 GIGA Sanctions Dataset의 자료범위를 고려하여 2010년으로 설정하였다. GIGA Sanctions Dataset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유럽연합(EU), 국제연합(UN)이 시행한 제재를 체계적으로 수록하고 있으며, 1990년 이전에 시작되어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제재 역시 포함한다. 본 연구는 GIGA 자료를 기본적인 제재자료로 사용하고, TIES와 제재 시행 주체의 공식 자료를 통해 제재의 목적과 시행기간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분석

기간에 따라 서로 다른 자료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줄이고 동일한 기준으로 제재를 구분하기 위해 1990년부터 2010년까지로 분석기간을 설정하였다.

최종 분석표본은 28개국을 21년 동안 관찰한 총 588개의 국가-연도로 구성된다. 핵심 종속변수인 정치적·시민적 자유지수는 전체 588개 관측치에서 이용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사용하는 선거민주주의지수와 자유민주주의지수에는 각각 2개의 결측치가 존재하여, 해당 분석에서는 586개의 관측치를 사용한다.

2. 독립변수: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

본 연구의 핵심 독립변수는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democracy-promoting economic sanctions)의 시행 여부이다. 앞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는 대상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개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실시, 권위주의적 통치의 완화와 같은 민주적인 변화를 목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성격을 가진 제재를 의미한다. 따라서 외교·안보 또는 경제적인 목적만을 가진 제재뿐만 아니라 민주화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경제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 조치와도 구별된다.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를 측정하기 위해 GIGA Sanctions Dataset(Portela & von Soest 2012a; 2012b)과 TIES(Morgan et al. 2014)를 활용하였다. 먼저 GIGA Sanctions Dataset의 민주화 목적 여부(democratisation)와 제재조치의 경제적 성격(eco)을 기준으로 제재를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민주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면서(democratisation=Y) 동시에 대상국 경제 또는 그 일부에 영향을 주도록 설계된 경제적 조치(eco=1)가 포함된 경우를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로 코딩하였다. 이후 TIES와 제재 시행 주체가 발표한 공식 성명, 관련 입법 및 행정명령 등의 공개자료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제재의 목적과 시행기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관심은 특정 국가-연도에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가 실제로 시행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 이에 해당 국가가 특정 연도에 하나 이상의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를 1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한 국가에 여러 건의 제재가 동시에 시행되고 있

는 경우에도 본 연구의 핵심 독립변수는 제재의 건수가 아니라 해당 연도에 민주주의 촉진 제재가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아울러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와 기타 목적의 경제제재를 구분하기 위해, GIGA에서 민주화 목적이 없는 것으로 분류되면서(democratisation=N) 경제적 성격을 갖는(eco=1) 제재가 시행된 국가-연도를 ‘기타 경제제재 (Other Sanctions)’로 별도 코딩하였다. 두 유형의 제재는 동일 국가-연도에 중첩될 수 있으므로 상호배타적인 범주로 강제 분류하지 않고 각각의 이항 변수로 측정하여 회귀모형에 동시에 투입하였다.

분석기간 동안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를 한 번 이상 경험한 국가는 전체 28개국 가운데 8개국이다. 이 가운데 미얀마, 중국, 북한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분석기간 전체에 걸쳐 제재상태가 관찰되며, 피지, 파키스탄, 러시아, 태국, 튀르키예는 분석기간 동안 제재상태의 변화가 존재한다.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미국의 2005년 이후 제재는 민주화 목적을 포함하지만 GIGA에서 군사협력 중단이라는 비경제적 조치로 분류되어 본 연구의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 변수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제재의 국가별·연도별 분포는 분석결과에서 별도로 살펴본다.

3. 종속변수: 정치적·시민적 자유

본 연구의 핵심 종속변수는 정치적·시민적 자유이다. 정치적·시민적 자유는 시민들이 정부의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와 같은 조직을 구성하여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즉 선거가 실시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시민과 정치세력이 실제로 자신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지를 의미한다.

정치적·시민적 자유 측정 변수로서 V-Dem(Varieties of Democracy)의 정치적·시민적 자유지수(Political Civil Liberties Index)를 사용하였다(Coppedge et al. 2023). V-Dem은 민주주의에 관한 다양한 지수를 제시하는 데이터셋으로서, 민주주의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자료원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정치적·시민적 자유지수는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

유 등을 중심으로 시민과 정치세력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연속형 지수이다. 지수의 값이 높을수록 정치적·시민적 자유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가 정치적·시민적 자유를 핵심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이유는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상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는 권위주의 정부를 약화시키고 정치적 개방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외부의 민주화 압력이 정권을 유지하는 데 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경우, 기존 정부가 정치적인 반대와 시민사회의 활동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정부가 정치적 반대와 동원을 통제하는 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한편 핵심 분석결과가 정치적·시민적 자유라는 하나의 지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두 가지 민주주의 지표를 추가적으로 사용한다. 첫째, V-Dem의 선거민주주의지수(Electoral Democracy Index)를 사용한다. 선거민주주의지수는 보통선거권,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결사와 표현의 자유 및 선출된 공직자 등 선거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를 포함한다. 둘째, 자유민주주의지수(Liberal Democracy Index)를 사용한다. 자유민주주의지수는 선거민주주의의 요소와 함께 개인과 소수자의 권리, 법치 및 행정부에 대한 제도적인 견제 등을 포함한다.

정치적·시민적 자유지수가 제재 시행기의 시민과 정치세력이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선거민주주의지수와 자유민주주의지수는 이보다 넓은 민주주의 수준을 측정한다. 따라서 정치적·시민적 자유를 핵심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선거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기본적인 결과가 다른 민주주의 지표에서도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대안적 종속변수로 사용한다. 세 지표는 모두 연속형 지수이며, 값이 높을수록 각각의 민주주의적 속성이 높은 수준으로 보장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4. 분석모형과 추정방법

본 연구는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가 시행되는 시기와 대상국의 정치적·시민적 자유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국가 및 연도 고정효과를 동시에 포함하는 이원고정효과 모형(two-way fixed effects model)을 사용한다. 분석의 기본모형은 다음과 같다.

$$Y_{it} = \beta_1 \cdot \text{DemocracySanction}_{it} + \alpha_i + \lambda_t + \epsilon_{it}$$

Y_{it} 는 국가 i 의 t 년도 정치적·시민적 자유 수준을 의미하며, V-Dem의 정치적·시민적 자유지수($v2x_clpol$)를 사용한다. $\text{DemocracySanction}_{it}$ 는 해당 국가가 특정 연도에 민주주의 촉진 목적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다. α_i 는 국가 고정효과, λ_t 는 연도 고정효과이며, ϵ_{it} 는 오차항이다. 따라서 β_1 는 국가 및 연도 고정효과를 고려한 이후, 동일 국가에서 제재가 시행되는 시기와 시행되지 않는 시기의 정치적·시민적 자유 수준의 차이를 나타낸다.

한편 기타 목적의 경제제재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국내·경제 및 대외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확장모형도 분석한다.

$$Y_{it} = \beta_1 \cdot \text{DemocracySanction}_{it} + \beta_2 \cdot \text{OtherSanction}_{it} + \gamma \cdot X_{it} + \alpha_i + \lambda_t + \epsilon_{it}$$

$\text{OtherSanction}_{it}$ 는 민주주의 촉진 목적을 갖지 않는 기타 경제제재의 시행 여부이다. X_{it} 에는 추가적인 분석에 따라 국내 무력충돌 여부와 전년도 1인당 GDP 성장률 및 ODA 유입 정도가 포함된다. 무력충돌은 당해연도 값을 사용하며, GDP와 ODA는 제재 시행과 동일 시점에서 상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년도 값을 사용하였다.

국가 고정효과를 포함하는 이유는 분석대상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국가별 정치제도, 역사적 경험, 지리적 조건과 같이 분석기간 동안 쉽게 변화하지 않는 특성은 경제제재의 시행과 정치적·시민적 자유 모두와 관련될 수 있다. 국가 고정효과를 포함함으로써

이러한 국가 간 차이보다는 동일한 국가 안에서 제재상태가 변화하는 시기에 정치적·시민적 자유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도 고정효과는 특정 연도에 분석대상 국가들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기 위해 포함한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냉전 종식 이후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촉진 정책이 확대되고 국제경제 및 국제정치 환경에서도 여러 변화가 발생한 시기이다. 이러한 변화는 하나의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국가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연도 고정효과를 포함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연도별 변화와 개별 국가에서 나타나는 제재상태의 변화를 구분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정치적 불안정이 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무력충돌(armed conflict) 변수를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 무력충돌은 국가 내에서 발생한 조직적 무력충돌 및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 폭력을 의미한다. 해당 국가-연도에서 이러한 무력충돌 또는 폭력이 발생한 경우를 1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설정하였다. 무력충돌 자료는 UCDP(Uppsala Conflict Data Program) Non-State Conflict Dataset과 UCDP One-sided Violence Dataset version 23.1을 활용하였다(Davies et al. 2023).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공동 및 조직적인 무력충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국가-연도 단위로 구분하였다.

무력충돌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이유는 경제제재가 시행되는 정치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는 쿠데타나 국내 정치적 충돌과 같이 대상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발생한 상황에서 시행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은 동시에 대상국의 정치적·시민적 자유와도 관련될 수 있다. 따라서 무력충돌을 고려한 경우에도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와 정치적·시민적 자유 사이의 관계가 유지되는지를 추가적으로 확인한다. 다만 무력충돌은 제재가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 제재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무력충돌을 기본모형의 필수적인 통제변수로 설정하기보다는 추가적인 분석에 활용한다.

한편 본 연구의 제재 자료에는 국가에 따라 제재가 시행되는 시기와 지속기간에 차이가 존재한다. 분석대상 28개국 가운데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를 경험한 국가는 8개국이며, 이 가운데 미얀마, 중국, 북한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분석기간 전체에 걸쳐 제재상태가 유지되어 제재 시행 여부의 국가 내 변화를 제공하지 않는다. 반면 피지, 파키스탄, 러시아, 태국, 튀르키예에서는 분석기간 동안 제재의 시행 또는 종료가 관찰된다. 따라서 이원고정효과 모형에서 핵심 계수의 추정치는 주로 이들 5개국의 국가 내 상태변화에 의존한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특정 국가에 대한 결과의 의존성을 점검하는 leave-one-country-out 분석과 분석기간 전체에 걸쳐 제재가 지속된 국가들을 제외한 추가 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처치시점이 국가별로 상이한 이원고정효과 모형에서 이미 처치를 받은 집단이 이후 처치를 받는 집단의 비교대상으로 활용되면서 추정치가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Goodman-Bacon 2021; Callaway & Sant'Anna 2021). 본 연구의 자료 역시 국가별 제재 시행 시점과 지속기간이 상이하고, 일부 국가는 분석기간 전체에 걸쳐 제재상태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TWFE 추정치를 엄격한 인과효과로 해석하지 않으며, 분석기간 전체에 걸쳐 제재상태가 유지된 중국, 북한, 미얀마를 제외한 추가 분석을 통해 기본적인 결과가 이들 국가의 포함 여부에 민감한지 확인한다.

표준오차는 국가 수준에서 군집화(clustered standard errors)한다. 동일한 국가에서 연도별로 관찰되는 오차가 서로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대상 국가가 28개국으로 군집의 수가 많지 않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이에 일반적인 국가 수준 군집표준오차와 함께 wild cluster bootstrap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통계적 유의성이 추론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한다(Roodman et al. 2019).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추가 분석을 실시한다. 첫째, 당해연도의 무력충돌 여부를 포함한 모형을 통해 정치적 불안정을 고려한 경우에도 결과가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둘째, 핵심 종속변수인 정치적·시민적 자유지수 이외에 선거민주주의지수와 자유민주주의지수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 결과가 하나의 민주주의 지표에 의존하여 나타나는지를 검토한다. 셋째, 제재상태의 국가 내 변화가 존재하는 국가를 하나씩 제외하는 leave-one-country-out 분석을 실시한다. 넷째, 분석기간 전체에 걸쳐 제재상태가 유지되는 미얀마, 중국, 북한을 제외한 표본에서도 결과를 다시 확인

한다. 다섯째, 전년도 1인당 GDP 성장률과 ODA를 추가하여 거시경제 및 대외적 요인을 고려한 경우에도 결과가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본 연구의 관심은 제재가 최초로 부과된 이후 민주주의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는가보다,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가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시기의 정치적·시민적 자유에 있다. 그러나 이원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더라도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의 직접적인 인과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제재는 무작위적으로 부과되지 않으며, 민주주의의 훼손이나 쿠데타, 부정선거, 정치적 불안정과 같은 국내 상황이 제재의 시행과 정치적·시민적 자유의 변화를 동시에 가져올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정치적·시민적 자유가 먼저 악화된 이후 이를 이유로 제재가 시행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제재가 정치적·시민적 자유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킨다고 주장하기보다, 국가 및 연도별 차이를 고려한 이후에도 제재가 시행되는 시기와 정치적·시민적 자유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나타나는지를 중심으로 결과를 해석하고자 한다.

IV. 분석결과

1. 기술통계와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의 분포

표본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 28개 권위주의 국가로 구성되며, 총 588개의 국가-연도 관측치를 포함한다. 이 가운데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가 시행된 경우는 78개로 전체 표본의 약 13.3%이다. 한편 민주주의 촉진 목적은 아니지만 경제적 성격을 가진 기타 경제제재가 시행된 경우는 81개 국가-연도로 나타났다. 핵심 종속변수인 정치적·시민적 자유지수는 전체 588개 관측치를 가진다. 선거민주주의지수와 자유민주주의지수에는 각각 2개의 결측치가 존재한다.

<표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 시행 여부	588	0.133	0.339	0.000	1.000
기타 경제제재 시행 여부	588	0.138	0.345	0.000	1.000
정치적·시민적 자유	588	0.396	0.277	0.010	0.919
선거민주주의	586	0.241	0.165	0.057	0.718
자유민주주의	586	0.139	0.104	0.011	0.535
무력충돌	588	0.333	0.472	0.000	1.000

<표 1>은 전체 분석표본에서 사용한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를 보여준다.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 시행 여부의 평균은 0.133이며, 기타 목적 경제제재의 평균은 0.138로 나타났다. 정치적·시민적 자유지수의 평균은 0.396이며, 최솟값은 0.010, 최댓값은 0.919이다. 선거민주주의지수의 평균은 0.241, 자유민주주의지수의 평균은 0.139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분석에서 사용하는 무력충돌은 전체 국가-연도의 약 33.3%에서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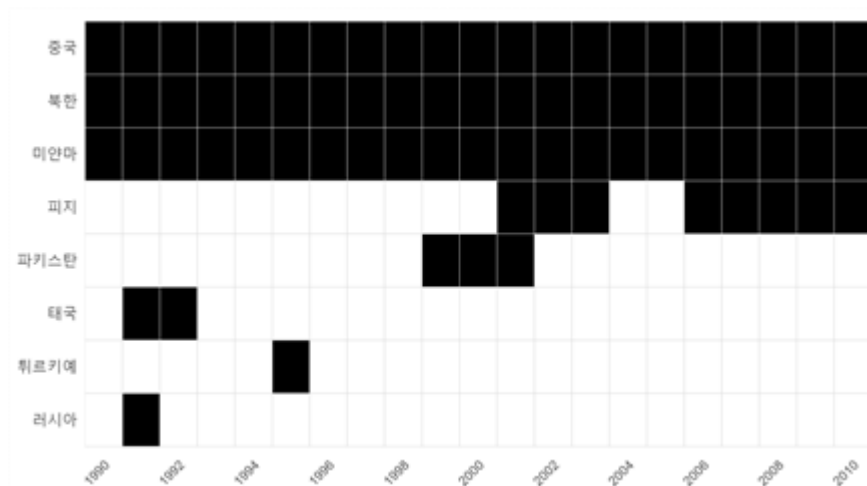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 시행 여부에 따라 민주주의 지표의 평균을 비교한 경우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가 시행된 국가-연도에서 정치적·시민적 자유지수의 평균은 0.172인 반면, 제재가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0.431로 나타났다. 선거민주주의지수는 각각 0.119와 0.259, 자유민주주의지수는 각각 0.054와 0.152로 나타났다. 즉 세 가지 지표 모두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가 시행된 국가-연도에서 평균적으로 낮은 값을 보였다. 다만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가 시행되지 않은 국가-연도에는 기타 목적의 경제제재가 시행된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단순 평균의 차이만으로 제재 유형에 따른 차이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러한 평균의 차이만으로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가 정치적·시민적 자유를 감소시킨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 민주주의 수준이 낮거나 국내 정치적인 위기가 발생한 국가에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가 시행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국가별 차이와 연도별 변화를 고려하고, 기타 목적의 경제제재 여부도 함께 고려한 분석을 통해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와 정치적·시민적 자유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다.

한편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가 시행된 시기에는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분석기간 동안 한 번 이상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를 경험한 국가는 미얀마, 중국, 피지, 북한, 파키스탄, 러시아, 태국, 튀르키예의 8개국이다. <그림 1>과 같이 미얀마, 중국, 북한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분석기간 전체에 걸쳐 제재상태가 관찰된다. 반면 피지는 2001~2003년과 2006~2010년, 파키스탄은 1999~2001년, 태국은 1991~1992년, 튀르키예는 1995년, 러시아는 1991년에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가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재를 한 번 이상 경험한 국가는 8개국이지만, 분석기간 안에서 실제로 제재상태의 변화가 관찰되는 국가는 5개국이다. 이와 같은 제재자료의 분포를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국가 및 연도 고정효과를 포함한 이원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와 정치적·시민적 자유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다.

<그림 1>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 시행 분포(1990~2010년)



▪ 주: 가로축은 1990~2010년이며, 세로축은 분석기간 중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를 경험한 8개국을 나타낸다. 검정색은 해당 국가-연도에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가 시행된 경우를 의미한다.

2.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와 정치적·시민적 자유

<표 2>는 국가 및 연도 고정효과를 포함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모든 모형에서 표준오차는 국가 수준에서 군집화하였다. 먼저 모형 (1)은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 시행 여부를 포함한 기본모형이다. 분석결과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의 계수는 -0.148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9$). 즉 국가와 연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 이후에도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가 시행되는 시기에는 정치적·시민적 자유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민주주의 촉진 목적을 갖지 않는 기타 경제제재 시행 여부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기타 경제제재를 함께 투입한 이후에도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의 계수는 -0.148로 기본모형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성도 유지되었다($p=.019$). 반면 기타 경제제재의 계수는 -0.072로 음(-)의 방향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와 정치적·시민적 자유 사이에서 나타난 음(-)의 관계는 기타 목적 경제제재 여부를 함께 고려한 이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에서는 국내 정치적 불안정을 고려하기 위해 무력충돌 여부를 추가하였다. 이 경우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의 계수는 -0.157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6$). 기타 경제제재의 계수는 -0.069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무력충돌의 계수는 -0.052로 음(-)의 방향을 보였으나 5% 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60$). 이와 같이 기타 경제제재와 국내 무력충돌을 함께 고려한 경우에도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와 정치적·시민적 자유 사이의 음의 관계는 유지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민주주의 촉진이라는 제재의 목적과 제재가 시행되는 시기의 정치적인 상황이 반드시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는 권위주의 정부를 약화시키고 민주화를 촉진하는 외부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가 시행되는 시기에 정치적·시민적 자유가 확대되기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주의 촉진 제재를 권위주의 정권의 변화와 민주주의의 개선에 연결한 기존 연구(von Soest & Wahman 2015)와는 다른 측면을 보여주며, 경제제재와 정치적 자

유 사이의 부정적인 관계를 제시한 연구들과는 결과의 방향에서 유사하다 (Peksen & Drury 2009, 2010; Adam & Tsarsitalidou 2019).

<표 2>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와 정치적·시민적 자유

	(1)기본모형	(2)기타 경제제재	(3)기타 경제제재 + 무력충돌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	-0.148*	-0.148*	-0.157**
	(0.060)	(0.059)	(0.053)
기타 경제제재		-0.072	-0.069
		(0.046)	(0.046)
무력충돌			-0.052
			(0.026)
국가 고정효과	포함	포함	포함
연도 고정효과	포함	포함	포함
관측치	588	588	588
R ²	0.78830	0.79124	0.79454
Within R ²	0.02459	0.03811	0.05334

▪ 주: 괄호 안은 국가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오차이다. * p<.05, ** p<.01, *** p<.001.

다만 이러한 결과를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가 정치적·시민적 자유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킨 결과로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경제제재는 무작위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수단이 아니며, 쿠데타, 부정선거, 민주주의 후퇴와 같은 국내의 정치적인 상황이 오히려 국제사회의 제재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정치적·시민적 자유가 먼저 악화된 이후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제재가 시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모형의 결과를 경제제재의 직접적인 인과효과로 해석하기보다,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가 시행되는 시기와 정치적·시민적 자유 사이에 나타나는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3. 강건성 검증

<표 3> 대안적 민주주의 지표를 이용한 강건성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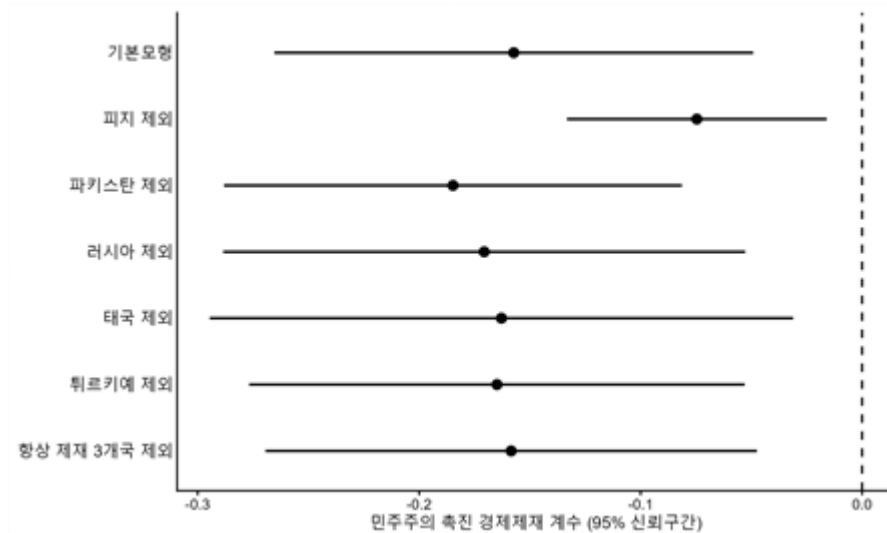
	(1) 선거민주주의	(2)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	-0.166***	-0.074***
	(0.019)	(0.016)
기타 경제제재	-0.046	-0.036
	(0.033)	(0.024)
국가 고정효과	포함	포함
연도 고정효과	포함	포함
관측치	586	586
R ²	0.66922	0.67461
Within R ²	0.06332	0.04314

▪ 주: 괄호 안은 국가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오차이다. * p<.05, ** p<.01, *** p<.001.

먼저 기본적인 결과가 정치적·시민적 자유라는 하나의 지표를 사용한 데에서 나타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선거민주주의지수와 자유민주주의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표 3>에서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의 계수는 선거민주주의를 사용한 경우 -0.166, 자유민주주의를 사용한 경우 -0.074로 나타났으며 두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기타 목적의 경제제재를 함께 고려한 이후에도 결과의 방향은 동일하였다. 따라서 기본모형에서 나타난 음(-)의 관계는 정치적·시민적 자유라는 하나의 지표에만 한정되어 나타난 결과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제재상태의 변화가 제한된 소수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였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분석기간 안에서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의 시행상태가 실제로 변화하는 국가는 피지, 파키스탄, 태국, 튀르키예, 러시아의 5개국이다. 따라서 특정 국가의 상태변화가 전체 분석결과를 주도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들 국가를 하나씩 제외한 뒤 동일한 모형을 반복하여 추정하였다.

<그림 2> 국가 제외에 따른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 계수의 강건성



▪ 주: 점은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 시행 여부의 추정계수를, 가로선은 95% 신뢰구간을 나타낸다. 모든 모형은 국가 및 연도 고정효과와 기타 경제제재 및 무력충돌 여부를 포함하며, 표준오차는 국가 수준에서 군집화하였다. ‘항상 제재 3개국 제외’ 모형은 분석기간 전체에서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 상태가 유지된 중국, 북한, 미얀마를 동시에 제외한 결과이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분석결과 5개의 제외모형 모두에서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의 계수는 음(-)의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추정계수는 약 -0.075에서 -0.185 사이에 분포하였다. 특히 피지를 제외한 경우 계수는 -0.075로 다른 제외모형에 비해 크기가 상당히 감소하였다. 따라서 기본적인 음의 관계가 특정 한 국가에 의해서만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계수의 크기는 일부 국가의 포함 여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 북한, 미얀마는 분석기간 전체에 걸쳐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 상태가 유지되어 국가 내 제재상태의 변화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처치시점이 국가별로 다른 이원고정효과 모형에서는 이미 처치된 집단이 이후 처치를 받는 집단의 비교대상으로 이용되면서 추정치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지적되어 왔다(Goodman-Bacon 2021; Callaway & Sant’Anna 2021). 이에 세 국가를 동시에 제외하여 동일한 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민주

주의 촉진 경제제재의 계수는 -0.158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7$). 따라서 분석기간 전체에 걸쳐 제재상태가 유지된 세 국가를 제외한 경우에도 기본적인 결과의 방향은 유지되었다.

<표 4> 거시경제 및 대외적 요인을 고려한 추가 분석

변수	(1) 정치적·시민적 자유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	-0.179**
	(0.056)
기타 경제제재	-0.052
	(0.050)
무력충돌	-0.057*
	(0.025)
1인당 GDP 성장률($t-1$)	-0.003
	(0.002)
ODA/GNI($t-1$)	-0.003
	(0.004)
국가 고정효과	포함
연도 고정효과	포함
관측치	498
R^2	0.83986
Within R^2	0.08964

▪ 주: 괄호 안은 국가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오차이다. 1인당 GDP 성장률과 ODA/GNI는 전년도($t-1$) 값을 사용하였다. * $p<.05$, ** $p<.01$, *** $p<.001$.

추가적으로 정치적·시민적 자유와 함께 변화할 수 있는 거시경제 및 대외적 요인을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WDI)에서 제공하는 1인당 GDP 성장률과 GNI 대비 순 ODA 수령

액 자료를 사용하였다. 두 변수는 제재가 시행되는 동일 연도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동시에 영향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t-1$) 값을 사용하였다. GDP와 ODA 자료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국가-연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관측치는 498개로 감소하였다.

<표 4>에서 기타 경제제재와 무력충돌, 전년도 GDP 성장률 및 ODA를 함께 고려한 경우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의 계수는 -0.179 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4$). 무력충돌 역시 -0.057 로 음(-)의 방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편 GDP 성장률과 ODA의 계수는 모두 음(-)의 방향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거시경제 및 대외적 요인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경우에도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가 시행되는 시기와 낮은 정치적·시민적 자유 사이의 관계는 유지되었다. 다만 ODA 자료는 일부 국가와 연도에서 결측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전체 표본보다 관측치가 감소한다. 따라서 이 분석은 기본모형을 대체하기보다 추가적인 강건성 검증으로 해석한다.

마지막으로 분석대상 국가가 28개국으로 군집의 수가 많지 않고, 실제 제재상태의 변화도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wild cluster bootstrap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Wild cluster bootstrap을 적용한 경우에도 기본 추정계수의 방향은 음(-)으로 동일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일반적인 국가 군집표준오차를 사용한 결과보다 약화되었다. 기본모형의 bootstrap p값은 Rademacher 가중치에서 .110, Webb 가중치에서 .112로 나타났으며, 기타 경제제재와 무력충돌을 함께 고려한 모형에서는 두 경우 모두 .095로 나타났다. 이는 추정계수의 방향은 여러 분석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반면, 제한된 유효변동으로 인해 통계적 추론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와 정치적·시민적 자유 사이에서 나타난 음(-)의 관계는 종속변수를 달리하거나 특정 국가를 제외하고, 기타 경제제재와 거시경제 및 대외적 요인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경우에도 대체로 유지되었다. 특히 분석기간 전체에 걸쳐 제재상태가 유지된 중국, 북한, 미얀마를 제외한 경우에도 음의 계수가 나타났다. 한편 wild cluster bootstrap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약화되어, 제한된 군집 수와 소수 국가에 집중된 유효

변동이 추론상의 한계로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결과를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의 직접적인 인과효과로 해석하기보다, 제재가 시행되는 시기와 낮은 정치적·시민적 자유가 함께 나타나는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민주주의 촉진을 목적으로 한 경제제재가 아시아·태평양 권위주의 국가의 정치적·시민적 자유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분석하였다. 경제제재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는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해 왔다. 경제제재 일반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제재가 대상국 정부의 정치적 억압을 강화하고 정치적 자유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제시되었다(Peksen & Drury 2009, 2010). 반면 민주주의 촉진 목적의 제재를 구분한 von Soest & Wahman(2015)은 이러한 제재가 권위주의 정권의 교체와 민주주의 수준의 향상에 긍정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분석하였다. 최근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서방의 경제제재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결과가 다시 제시되고 있다(Peez 2025).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논의를 아시아·태평양 권위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다시 검토하였다. 특히 제재가 최종적으로 민주화를 가져오는가보다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가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시기에 시민과 정치세력이 어떠한 정치적·시민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 28개 권위주의 국가의 국가-연도 패널자료를 구성하였다. 핵심 종속변수로 정치적·시민적 자유지수를 사용하고, 국가 및 연도 고정효과를 포함한 이원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가 시행되는 시기에는 정치적·시민적 자유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국가 및 연도 고정효과를 포함한 기본모형에서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의 계수는 -0.148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민주주의 촉진 목적을 가지지 않은 기타 경제제재를 함께 고려한 이후에도 계수의 크기와 방향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선거민주주

의지수와 자유민주주의지수를 사용한 경우에도 각각 -0.166과 -0.074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분석기간 전체에 걸쳐 제재상태가 유지된 중국, 북한, 미얀마를 제외한 경우에도 -0.158의 음(-)의 계수가 나타났으며, GDP 성장률과 ODA 등 추가적인 요인을 고려한 분석에서도 기본적인 결과의 방향은 유지되었다. 다만 제한된 군집 수를 고려하여 wild cluster bootstrap을 적용한 경우 통계적 유의성은 일반적인 국가 군집표준오차를 사용한 결과보다 약화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여러 분석에서 음(-)의 방향이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점과 함께, 제한된 유효변동으로 인해 통계적 추론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추가 분석을 종합하면 기본모형에서 나타난 음의 관계가 하나의 민주주의 지표나 특정 국가의 사례에만 의존하여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치적·시민적 자유 이외에 선거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사용한 경우에도 계수의 방향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제재상태의 변화가 있었던 국가를 하나씩 제외한 경우에도 음의 관계는 유지되었다. 국내 무력충돌을 포함한 경우에도 기본적인 결과의 방향은 유지되었다. 한편 wild cluster bootstrap에서는 추정계수의 방향은 동일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약화되었다. 이러한 분석으로 제재의 선택적 시행이나 제재 시행-정치적·시민적 자유 간 시간적인 선후관계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추가 분석을 강건성 검증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핵심적인 결과는 민주주의를 촉진하기 위한 경제제재가 시행되는 시기에 정치적·시민적 자유가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는 권위주의 정부의 경제적·정치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이후 정치적 개방이나 정권교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제재가 실제로 시행되는 시기에는 기존 정부가 정치적인 반대세력이나 시민사회를 통제하는 상황이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다. 한편 정치적 자유의 악화가 먼저 발생하고, 이에 대응하여 국제사회가 제재를 시행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제재의 역설’은 경제제재가 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저해한다는 의미라기보다, 민주주의 촉진이라는 제재의 명시적인 목적과 실제 제재가 시행되고 있는 시기의 낮은 정치적·시민적 자유가 함께 나타나는 상황을 의미한다.

제재의 목적은 대상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개선하는 데 있지만, 그 목적이 제재 시행기에 곧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 촉진이라는 외부 압력이 권위주의 정부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동시에, 기존 정부가 생존을 위해 정치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적어도 아시아·태평양 권위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가 시행되는 시기가 정치적·시민적 자유의 확대보다는 낮은 자유 수준과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 연구와 관련하여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민주주의 촉진이라는 제재의 목적과 제재가 실제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내 정치적 상황은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민주주의 촉진 제재가 정권교체와 민주주의 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제시되어 왔지만(von Soest & Wahman 2015), 최근 연구에서는 민주주의 및 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제재에서도 부정적인 민주주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가 제시되고 있다(Peez 2025).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와 일정 부분 연결되지만, 제재 부과 이후의 장기적인 민주주의 변화보다는 아시아·태평양 권위주의 국가에서 제재가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기간의 정치적·시민적 자유에 초점을 두었다는 차이가 있다. 즉 본 연구의 관심은 제재가 민주주의를 최종적으로 성공시키는가라는 질문보다, 제재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시민과 정치세력이 어느 정도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있다.

둘째,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의 성과를 최종적인 정권교체나 민주주의 수준의 변화만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제재를 통해 권위주의 정부가 약화되고 이후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제재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시민사회와 정치적 반대세력의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를 평가할 때에는 제재 이후의 체제변화뿐 아니라 제재가 실제로 시행되는 기간에 시민들이 어떠한 정치적 환경에 놓여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경제제재가 무작위적으로 부과되지 않는다는 문제이다.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는 쿠데타, 부정선거, 민주주의 후퇴 또는 정치적 억압과 같은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으로 시행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시민적 자유의 악화가 제재보다 먼저 발

생하고 이것이 오히려 제재의 시행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가 및 연도 고정효과를 포함하고 기타 경제제재, 무력충돌 및 일부 시간가변적 요인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지만 이러한 분석만으로 제재 시행과 정치적·시민적 자유 사이의 인과적인 방향을 확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가 정치적·시민적 자유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킨다는 의미보다, 제재가 시행되는 시기와 낮은 정치적·시민적 자유 수준이 체계적으로 함께 나타나는 관계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분석자료에서 제재상태의 국가 내 변화가 제한된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전체 28개국 가운데 분석기간 중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를 경험한 국가는 8개국이며, 이 가운데 실제로 제재상태의 변화가 관찰되는 국가는 피지, 파키스탄, 태국, 튀르키예, 러시아의 5개국이다. 또한 중국, 북한, 미얀마는 분석기간 전체에 걸쳐 제재상태가 관찰되기 때문에 동일 분석기간 안에서 제재 시행 이전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국가별로 제재 시행시점과 지속기간이 다른 자료에서는 이원 고정효과 추정에서 이미 제재상태에 있는 국가가 이후 제재를 받는 국가와 비교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Goodman-Bacon 2021; Callaway & Sant'Anna 2021). 본 연구에서는 분석기간 전체에 걸쳐 제재상태가 유지된 세 국가를 제외하거나 상태변화가 존재하는 국가를 하나씩 제외하는 분석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 역시 제한된 유효변동 자체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Wild cluster bootstrap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약화된 결과 역시 이러한 자료의 한계를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정치적·시민적 자유와 함께 변화할 수 있는 모든 시간가변적 요인을 분석에 포함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전년도 1인당 GDP 성장률과 ODA를 고려하였지만, 일부 국가에서 ODA 자료가 장기간 존재하지 않아 해당 분석의 관측치가 감소하였다. 국가역량이나 국제적 지원의 형태 등 다른 요인들도 제재의 시행과 대상국의 국내정치에 동시에 관련될 수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통제변수를 포함한 결과 역시 기본모형의 강건성을 확인하는 보조적인 분석으로 볼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

가 부과된 구체적인 정치적 사건과 시점을 보다 세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재가 시행되기 이전에 정치적·시민적 자유가 이미 악화되고 있었는지, 이후 권위주의 정부의 정치적 통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는지를 구분한다면 제재와 정치적 자유 사이의 시간적인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다 긴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제재 시행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충분히 관찰하거나, 제재의 유형과 시행 주체, 강도 및 지속기간에 따른 차이를 구분하는 분석도 필요하다. 대상국의 정권 유형이나 국내 정치적인 취약성에 따라 동일한 민주주의 촉진 제재가 다른 결과와 연결되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 후속 연구가 될 수 있다.

본 연구가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가 단순히 ‘효과적인가’ 또는 ‘효과적이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한정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되는 경제제재가 실제로 작동하는 동안, 그 대상국의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자유를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가도 함께 질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아시아·태평양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가 시행되는 시기와 낮은 정치적·시민적 자유가 함께 나타났다. 따라서 민주주의 촉진 제재의 성과를 판단할 때에는 제재가 최종적으로 정권교체나 민주화를 가져왔는지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시민의 정치적·시민적 자유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를 촉진한다는 제재의 목적과 제재 시행기에 나타나는 정치적 자유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이러한 괴리가 본 연구에서 말하는 민주주의 촉진 경제제재의 역설이다.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Adam, A. and S. Tsarsitalidou (2019). "Do Sanctions Lead to a Decline in Civil Liberties?" *Public Choice*. Vol. 180. No. 3-4, pp. 191-215.
- Callaway, B. and P. H. C. Sant'Anna (2021). "Difference-in-Differences with Multiple Time Periods." *Journal of Econometrics*. Vol. 225. No. 2, pp. 200-230.
- Davies, S., T. Pettersson and M. Öberg (2023). "Organized Violence 1989 - 2022, and the Return of Conflict between States."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60. No. 4, pp. 691 - 708.
- Escribà-Folch, A. (2012). "Authoritarian Responses to Foreign Pressure: Spending, Repression, and Sanction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45. No. 6, pp. 683-713.
- Goodman-Bacon, A. (2021). "Difference-in-Differences with Variation in Treatment Timing." *Journal of Econometrics*. Vol. 225. No. 2, pp. 254-277.
- Marinov, N. and S. Nili (2015). "Sanctions and Democracy."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41. No. 4, pp. 765-778.
- Morgan, T. C., N. Bapat and Y. Kobayashi (2014). "Threat and Imposition of Economic Sanctions 1945-2005: Updating the TIES Dataset."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 31. No. 5, pp. 541-558.
- Peez, A. (2025). "Re-examining the Effects of Western Sanctions on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21st Century." *Political Science Research and Methods*. First View, pp. 1-19.
- Peksen, D. and A. C. Drury (2009). "Economic Sanctions and Political Repression: Assessing the Impact of Coercive Diplomacy on Political Freedoms." *Human Rights Review*. Vol. 10. No. 3, pp. 393-411.
- Peksen, D. and A. C. Drury (2010). "Coercive or Corrosive: The Negative Impact of Economic Sanctions on Democracy."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36. No. 3, pp. 240-264.
- Pospieszna, P. and P. M. Weber (2020). "Amplifying and Nullifying the Impact of Democratic Sanctions through Aid to Civil Society."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46. No. 5, pp. 724-748.

- Roodman, D., M. Ø. Nielsen, J. G. MacKinnon and M. D. Webb (2019). “Fast and Wild: Bootstrap Inference in Stata Using boottest.” *The Stata Journal*. Vol. 19. No. 1, pp. 4 - 60.
- Von Soest, C. and M. Wahman (2015). “Are Democratic Sanctions Really Counterproductive?” *Democratization*. Vol. 22. No. 6, pp. 957-980.
- Wahman, M., J. Teorell and A. Hadenius (2013). “Authoritarian Regime Types Revisited: Updated Data in Comparative Perspective.” *Contemporary Politics*. Vol. 19. No. 1, pp. 19-34.
- Wood, R. M. (2008). “‘A Hand upon the Throat of the Nation’: Economic Sanctions and State Repression, 1976-2001.”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52. No. 3, pp. 489-513.

2. 기타

- Coppedge, M. et al. (2023). “V-Dem Codebook v13.” Varieties of Democracy (V-Dem) Project.
- Portela, C. and C. von Soest (2012a). “GIGA Sanctions Dataset.” German Institute for Global and Area Studies (GIGA). Data File Version 1.0.0.
- Portela, C. and C. von Soest (2012b). “GIGA Sanctions Dataset Codebook: Version 18 June 2012.” German Institute for Global and Area Studies (GIGA).
-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 ESCAP). “Country Groupings.” Asia-Pacific SDG Gateway. <https://data.unescap.org/index.php/resources/country-groupings> (검색일: 2026. 7. 15.)
- Uppsala Conflict Data Program (UCDP) (2023a). “UCDP Non-State Conflict Dataset v. 23.1.” Department of Peace and Conflict Research, Uppsala University.
- Uppsala Conflict Data Program (UCDP) (2023b). “UCDP One-sided Violence Dataset v. 23.1.” Department of Peace and Conflict Research, Uppsala University.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DI).” World Bank DataBank. (검색일: 2026. 8. 22.)

| 논문투고일 : 2026년 08월 12일 |

| 논문심사일 : 2026년 08월 19일 |

| 게재확정일 : 2026년 08월 24일 |

| ABSTRACT |

**The Paradox of Sanctions for Democracy:
Democracy-Promoting Economic Sanctions and Political
and Civil Liberties in Authoritarian States in the
Asia-Pacific**

Yena Shim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promoting economic sanctions and political and civil liberties in authoritarian states in the Asia-Pacific region. Although such sanctions are explicitly intended to promote democratic change, authoritarian governments facing external pressure may respond by strengthening political control over opposition groups and civil society. To examine this possibility, the study constructs a country-year panel dataset covering 28 authoritarian states in the Asia-Pacific from 1990 to 2010 and applies two-way fixed-effects models with country and year fixed effects. The main dependent variable is V-Dem's Political Civil Liberties Index, while Electoral Democracy and Liberal Democracy indices are used as alternative measures. The analysis also distinguishes democracy-promoting economic sanctions from other economic sanctions that do not have democracy promotion as their stated objective and additionally considers domestic armed conflict. The results show that political and civil liberties were lower during periods in which democracy-promoting economic sanctions were in effect, and this negative relationship remained after other economic sanctions were taken into account. The overall pattern was also maintained when domestic armed

conflict was considered, when alternative measures of democracy were used, and when individual sanctioned countries or countries under sanctions throughout the entire study period were excluded. Additional analyses incorporating lagged GDP per capita growth an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lso produced results in the same direc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democratic purpose of sanctions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domestic political conditions observed while sanctions are actually in effect, highlighting a potential paradox between democracy promotion as a stated policy objective and the level of political and civil liberties during sanction periods.

- Key words: democracy-promoting economic sanctions; democracy; political and civil liberties; authoritarianism; Asia-Pacific